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 정 법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ㄴ. 관계행정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과 여부에 관한 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ㄷ.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ㅁ.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X	O
②	O	O	X	O	X
③	O	X	O	X	O
④	X	O	O	X	O
⑤	X	X	O	O	X

2.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⑤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탈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하는 공고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ㄴ.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 ㄷ.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과거에 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조치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 ㄹ. 행정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ㄷ, ㅁ
- ⑤ ㄷ, ㄹ, ㅁ

4.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면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수령한 자가 그 협약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관할행정청과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X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에게 위 가설건축물을 임대하였다(임대기간: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甲은 위 대부계약 종료 후 X국유지에 관하여 관할행정청과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乙은 2026. 3. 1. 현재까지 위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 ① 관할행정청은 甲에게 2026. 1. 1.부터 2026. 3. 1.까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일반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하는 관할행정청의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대한민국은 甲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甲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⑤ 관할행정청은 乙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6.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저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②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견책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징계부가금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나, 징계부가금처분과 내용상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⑤ 감사원은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7.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ㄴ.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 ㄷ.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ㄹ. 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인가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ㅁ.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X	X	O	X
②	O	X	O	X	X
③	O	O	O	O	X
④	O	O	X	X	O
⑤	O	O	X	O	O

8.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 ㄴ. 항고소송에 있어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의해 행정청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ㄹ.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丙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 A에게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A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이하 ‘인가’라고 함)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위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A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 ① A가 甲에게 인가를 하는 경우, 乙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甲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 ② A가 甲에게 인가를 한 후, A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乙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甲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A가 甲에 대한 인가를 직권취소한 경우,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인가취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A가 甲에게 인가를 하면서 乙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 ⑤ 乙이 받은 인가는 乙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취소 가능성을 乙은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가 직권취소를 한 경우 A가 乙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10.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약이란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②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수산업법」상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행정청은 확약 후에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1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나.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르.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나, 르
- ⑤ 다, 르

12.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 물품구매계약 등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이나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입주계약 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입주계약 해지통보는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공법상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의 시행령에서 사립대학교를 공공기관의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 ②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보공개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③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공공기관이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있으나,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 乙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양수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甲은 동법에 따라 乙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 ① 甲이 영업양수 대상에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甲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② 「화물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 ③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때에는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관할행정청은 甲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때 甲의 책임 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지 않고, 공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乙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 ⑤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운송사업자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대물적 제재처분’과는 구별된다.

1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 ②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③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결의 내용상 위법도 이에 포함된다.

16.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ㄱ.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ㄴ. 법률의 조례에 대한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 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면 그러한 행정사무조사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서 주민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⑤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18.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甲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였으나 甲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甲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입국금지결정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입국금지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라. 甲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입국금지처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나, 라
- ③ 가, 다, 라
- ④ 나, 다, 라
- ⑤ 가, 나, 다, 라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甲은 정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해야 할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장기간 지나치게 좁게 유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① 기본권으로서 甲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 ②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 ③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장애인의 접근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작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
- ⑤ 「국가배상법」 제3조가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 ②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 ③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④ 손실보상금 채권(청구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이전대상 건축물 등을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제5항 등에 따라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수용이 발생한다.

21. 행정의 재량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③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절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기속재량행위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 따른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2.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다.
- ②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 ③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또는 제4조는 위임 또는 재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법령상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한 위법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23.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 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 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ㄹ. 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ㅁ. 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만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X	O	X	X
②	O	O	O	X	X
③	O	X	O	X	O
④	O	O	X	O	X
⑤	X	O	X	O	O

2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법」상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가.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이다.

다.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행정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라. 형량하자의 법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 ④ 가, 나, 다
- ⑤ 나, 다, 라